

#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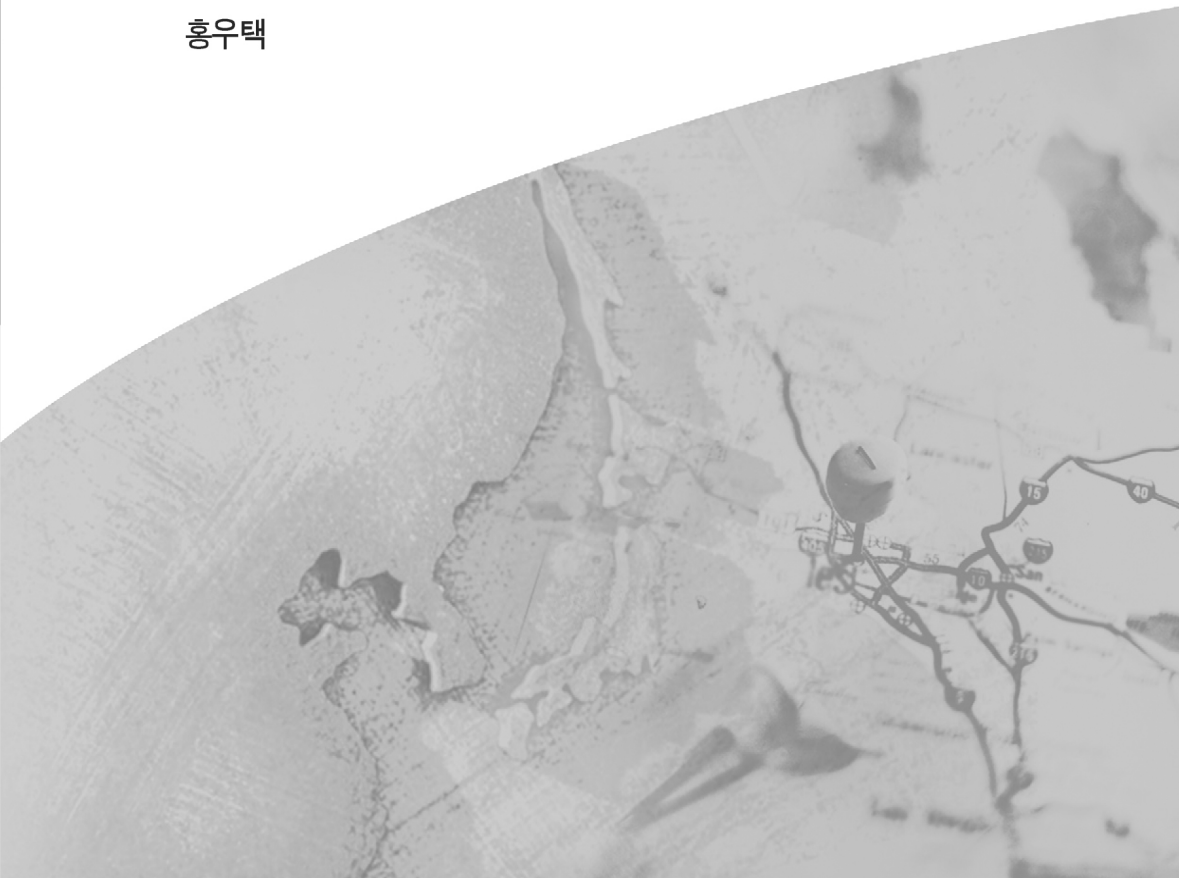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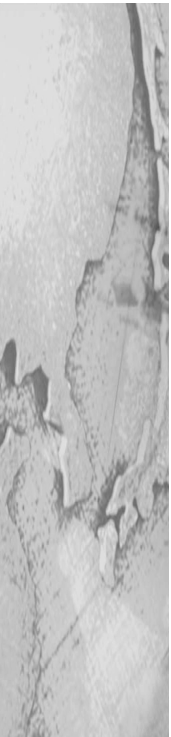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0-10

#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T. 02-745-8000)

인 쇄 처 양동문화사 (T. 02-2272-1767)

ISBN 978-89-8479-556-3 93340

가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	1
II. 북한의 의도와 억지의 필요성 .....	9
III. 핵억지이론과 전쟁가능성 .....	19
1. 억지의 구조 .....	25
2. 고전억지이론의 시각 .....	28
3. 세력균형이론의 시각 .....	31
4. 세력전이이론의 시각 .....	34
5. 현실에서의 핵전략 .....	39
6. 각각의 억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46
IV. 핵억지와 군비경쟁 .....	53
V. 핵우산의 허와 실 .....	61
VI. 결론: 억지의 방향 .....	73
참고문헌 .....	7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85

# 표 목 차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표 Ⅲ-1> 핵억지이론들이 주장하는 전쟁가능성 요약 ..... 49

# 그림 목 차

<그림 Ⅲ-1> 역지의 구조 .....	27
<그림 Ⅲ-2> 고전역지이론과 핵전쟁의 가능성 .....	30
<그림 Ⅲ-3> 세력균형이론과 핵전쟁의 가능성 .....	33
<그림 Ⅲ-4> 세력전이이론과 핵전쟁 가능성 .....	37

# I. 서론\*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집필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유진석(숙명여대) 그리고 최종건(연세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큰 틀에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억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핵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기존의 핵억지이론에서 유추하였다. 나아가 남한의 핵억지 구축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시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남한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고 또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제기되는 각각의 주제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도출하였다.

천안함 폭침, 우라늄 농축,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이 2010년에 들어 발생하였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6·25전쟁 이래 북한은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과 테러를 감행해 왔다. 가까이는 1, 2차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었고, 멀리는 미얀마 테러나 KAL기 폭파사건 등과 같은 테러가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테러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만드는 자가발전적인 요인이 북한의 이러한 과거 행적들이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과거 행적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사건 중의 하나다.

북한이 무슨 목적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목적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고위 탈북자의 한 사람인 고 황장엽 선생은 한반도를 전쟁이 일상화된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고 해석하고, 대북 군사적 대응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에서는 대남 혹은 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도발을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

I
II
III
IV
V
VI

어놓기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대내적인 체제강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을 한다.

도발의 목적이나 이유가 어찌됐든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특수부대를 포함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핵·화학·생물무기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은 그 속성상 공격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수월치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은 적어도 비대칭 전력이라는 면에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단언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 어쩌면 북한이 지니고 있는 비대칭 전력은 남한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일반적인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열세이지만, 비대칭 전력 면에서 남한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위협은 남한의 행동반경을 충분히 제한하고도 남는다.<sup>1</sup>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는 대남 협박 언사 중의 하나인 서울 혹은 남한의 불바다 위협은 더욱 남한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 2010년 5월 19일 CNN 인터넷 판에서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지라도 남한의 보복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이유는 비록 남한과 미국이 재래식 무기 전력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보복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등 뒤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상응하는

---

<sup>1</sup> 남한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보다 우위라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기술적인 면이나 성능 면에서는 남한이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재래식 무기의 숫자가 의미하는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절대 남한이 우세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군사용징을 남한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한의 행동반경이 위축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북한은 현재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sup>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을 거짓에 가깝다고 치부하고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의 경우 테러와 같은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일반적인 전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성 때문만은 아니다. 억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방어용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억지력은 방어용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갖추으로써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북한이 핵을 이용한다면 핵무기의 살상력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남한이 겪어야 할 혼란과 공황은 형언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무장으로부터 오는 불안정성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향의 수립을 뒤로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도발의 목적이나 이유가 어찌됐든 북한의 도발로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남한으로서는 북한이 도발이라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도발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남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이후

---

2. 2009년 6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북핵 도발대책 특위’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시설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5일.

3. 북한의 핵이 갖는 위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분석,” 『국가전략』, 제11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05).

I
II
III
IV
V
VI

가진 대답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sup>4</sup>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국방의 기본개념을 수동적 방어 전략에서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sup>5</sup> 특히 이 보고에서는 능동적 억제 전략의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즉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 전력으로 도발하려 하게 되면 북한의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 능동적 억제 전략이라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 나온 정책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격이후 가진 국민담화(2010.11.29)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억지(deterrence)’의 개념은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북억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억지가 성공하려면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 최소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고, 이때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능력이 없는 의지표명은 공수포에 지나

---

4. 『조선일보』, 2010년 5월 25일.

5. 『조선일보』, 2010년 9월 6일.

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통해 북한의 핵을 억지하고 있다. 상대방의 핵사용을 억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핵을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하여 북한과의 핵비대칭 관계를 해소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문점들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등의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지 않고서는 북한 핵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억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북한 핵문제와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되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핵억지이론이 제시하는 억지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상대방의 핵을 억지하려면 어떠한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지가 억지이론의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억지이론의 주장들을 논리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현실세계에서 국가들은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4장에서는 남한이 핵억지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과연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시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5장에서는 현재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에 대해 남한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으며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6장 결론 부분에서는 앞의 장들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

I

II

III

IV

V

VI

연구의 주제로 남겨놓고, 그러한 방안들이 어떠한 기초 하에 구상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 II. 북한의 의도와 억지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 통일에 부합하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12월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듬해 2월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표하였다.<sup>6</sup> 합의된 사항들이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 간에 지켜져 왔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선언은 사실상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몇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과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인지 북한이 스스로 핵포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기까지 한다.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듯 북한은 틈틈이 그들의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한 발표나 성명들은 최근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자위적 조치로서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도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sup>6</sup> 비핵화공동선언문은 ①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③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④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의 6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up>7</sup> 『연합뉴스』, 2010년 9월 2일.

I
II
III
IV
V
VI

우리의 영해주변을 다니는 한 우리는 핵억제력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sup>8</sup> 위의 북한 측 발언만을 놓고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핵보유를 굽히지 않는 것일까?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4가지의 해석이 존재한다.<sup>9</sup> 첫째, 방어적 군사목적설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억지력을 확보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균형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격적 군사목적설로 유사시 미군개입을 저지하고 대남도발 시 통일의 수단으로 핵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셋째, 외교적 협상카드로의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다는 외교목적설이다. 넷째, 정치적 동기설로 핵무기는 북한정권과 체제를 공고히 단속할 수 있음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위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4가지의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건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에게 핵무기는 위의 4가지 목적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수단으로 비춰진다. 그중에서 남한이 가장 우려할 만한 도깨비 방망이의 쓰임새는 공격용으로서의 방망이다. 비록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구분하는 기

---

<sup>8</sup> 『연합뉴스』, 2010년 9월 30일.

<sup>9</sup>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도를 정리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Victor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2 (2002).



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는 더욱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핵무기는 공격을 전제로 방어에 쓰이는 무기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지도로 해서 방어를 하는 무기이기에,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이다. 한 국가의 의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는 그리 흔치 않다. 그렇지만 시도가 없지도 않았다. 그러한 연구 중에 하나는 국가의 의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상유지(status quo)에 대한 국가의 성향을 삼고 있다. 즉 한 국가가 현상유지적인 국가냐 아니면 현상타파(revisionist)적인 국가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행동을 짐작하려고 한다.<sup>10</sup>

일반적으로 현상유지적인 국가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려는 국가인 반면, 현상타파적인 국가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는 국가를 일컬어 왔다. 그러나 국가 간에 존재하는 질서는 다양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질서를 기준으로 삼고 국가의 성향이 현상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명시적으로 합의된 조약 등에 바탕을 둔 질서를 기준으로 국가의 성향을 판단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국가 간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질서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묵시적인 질서는 두 국가 간에 새로운 변수도입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 간에 새로운 관계변수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북한은 현상타파적인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예로 만일 남한이

<sup>10</sup> 북한의 의도를 현상유지와 현상타파라는 기준을 두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홍우택,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8).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새롭고 획기적인 협력관계 성립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를 두고도 남한을 현상타파적인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상유지라는 개념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일컫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을 현상유지적인 국가인지 아니면 현상타파적인 국가인지 판단할 때, 만일 북한이 현재의 분단 상태를 존속하는 것을 추구하는 국가라면 현상유지적인 국가이고, 그렇지 않고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라면 현상타파적인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한 국가는 현상유지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또 뒤바뀔 수가 있다. 더구나 어떤 기준은 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양국 모두를 현상타파적인 국가로 분류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자신이 중심이 되는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남북한 모두를 현상타파적인 국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두고 북한의 국가성향이 현상유지적이냐 아니면 현상타파적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북한은 스스로 국제질서에서 고립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자신을 구속하는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무기를 남북관계나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체제유지를 북한의 목적이라고 보고 자신의 체제유지만을 추구하는 현상유지적인 국가로 북한을 분류할지라도, 체제유지를 위해 선택한 수단들은 결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질서의 유지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전쟁을 최상의 선호도로 삼고 있

는 국가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현상타파적인 성향을 갖는 국가라면 핵무기가 공격용으로 쓰일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혹자들은 그것을 안보불감증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것뿐만은 아니다. 핵의 확산으로 인한 핵의 균형이 전쟁을 막는다고 보는 세력균형이론의 핵심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왈츠(Kenneth N. Waltz)와 같은 학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공격이 있을 것이고, 이는 중국적으로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1</sup> 또한 그는 약소국이면서 핵보유국은 외부로부터의 보복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에는 항상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Gaddafi)같은 독재자는 비록 외부를 향해서는 극단적인 언사를 일삼는 비이성적인 행위자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만약 카다피를 권좌에서 아내려는 외부세계의 시도가 있고 그래서 그가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시에는 오히려 카다피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외부에 표출하지 않고 신중하고 암전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보았다.<sup>12</sup> 약소국 지도자들이 과도한 위협을 감수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펠드만(Shai Feldman)같은 학자도 왈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sup>11</sup>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p. 39.

<sup>12</sup> *Ibid.*, p. 13.

I
II
III
IV
V
VI

있다.<sup>13</sup>

위와 같은 왈츠의 주장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사용하여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때때로 북한이 남한을 향해 과격한 언사를 내뱉을 지라도 그것은 단지 불만의 표현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언들도 남한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불바다로 만드는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현재 남한은 핵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미국이 당연히 보복공격을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붕괴를 예견한 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핵을 사용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사실 핵무기가 한 국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로 퍼진 이후 핵무기 보유국 간에 발생한 전쟁은 없었다. 어쩌면 왈츠의 주장대로 핵전쟁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핵전쟁으로 인해 겪게 되는 막대한 피해의 확실성은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특히 냉전시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였던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이 없었던 것을 보면 왈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가 전쟁비용만을 계산에 넣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시대 어느 경우의 전쟁이건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는 비용과 더불어 전쟁에서 이길 경우의 이득을 염두에 두었

---

<sup>13</sup> Shai Feldman, *Israeli Nuclear Deterrence: A Strategy for the 1980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 163.

다고 볼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보다 많다고 판단한다면 현상타파적인 전쟁은 항상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왈츠는 핵의 시대에서의 전쟁비용은 생존자체가 불확실한 참혹한 모습이라고 보았다. 재래식 무기만이 있는 세상에서 억지가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피해에 대한 예상이 모호하였기 때문이지만, 핵의 시대에서 피해의 예상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핵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듯싶다. 재래식 무기로 평양이 파괴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득만 있다면 북한은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핵으로 평양이 파괴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득만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자살테러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류탄을 터트려 자살테러를 감행하는 것과 핵폭탄을 터트려 자살테러를 감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자살테러를 감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테러를 통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얻는 이득은 극히 주관적이다.

냉전시대를 지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북한에 의한 각종 테러와 함께 남북협력의 양상이 보이는 각종 합의들이 뒤섞여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시점 혹은 현상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의 묘사는 달라질 수 있다. ‘테러와 같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만들어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니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테러를 일삼아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체제의 속성상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여러 가지 해석만이 분분할 뿐이다. 하지만 군사적 도발과 같은 그들의

I
II
III
IV
V
VI

행적은 남북관계에 숨어있는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남한이 억지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 장에서는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는 것인지에 대해 억지이론들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 Ⅲ. 핵억지이론과 전쟁가능성





미국이 핵을 독점하던 시기를 지나 소련과 기타 국가들도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면서 핵억지이론은 세상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소련의 핵능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어 미국의 핵능력과 견주게 되면서 핵억지이론은 상대방으로부터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핵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핵억지 이론이 풀어낸 억지능력은 상대적 핵능력을 바탕으로 전쟁가능성을 직관적으로 계산한 값이었다. 핵억지이론이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험적 사례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유일하게 핵을 사용한 전쟁 사례는 2차 대전 말기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투하했던 것이었다. 단 하나의 사례를 통해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연구자들은 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각기 특정한 가정 하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유추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추한 조건들, 즉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들과 반대되는 조건을 계산한 것이 핵억지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핵억지이론이 제시하는 핵전쟁가능성의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남한은 현재까지 6자회담이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6자회담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어느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다행스런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억지방안은 군사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은 정치적인 이유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I
II
III
IV
V
VI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십만 개의 전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전쟁들의 이유도 수십만 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은 군사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선 이루어 질 수 없다.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방안검토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핵억지이론은 이러한 방안검토에서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핵억지이론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인 핵능력 면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핵억지이론들이 서로 다른 직관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보니 이론들의 주장 간에 간격은 좁지가 않다. 심지어 핵전쟁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이 내어놓는 주장들은 서로 상반되기까지 한다.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동일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추론된 이론들 간에도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사회과학의 현실을 생각하면, 핵억지이론 간에 상반된 주장을 바라보는 것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특정한 억지이론에 바탕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다른 억지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어느 억지이론에서 보다 적절한 대응책을 유추할 수 있는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핵억지이론들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논리로 특정한 조건이 전쟁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어느 이론이 한국 상황에 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일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둘러본 핵억지이론은 핵전쟁가능성을 분석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 즉 고전억지이론(classical deterrence theory),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 그리고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다.<sup>14</sup> 위의 세 가지 이론들을 중심으로 각기 제시하는 핵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둘러보고 이 이론들이 제시하는 처방을 짚어보았다. 일반적으로 위의 이론들은 거형이론(grand theory)으로 여겨지는 까닭에 특정지역이나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곤 한다. 이와 같은 지적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핵억지이론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대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전쟁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였다. 그리고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두 국가였기에 이 두 국가를 상정한 핵억지이론은 세계질서에 관한 거형이론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위의 핵억지이론들이 좁은 범위의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핵억지이론은 두 국가 간의 상호역학관계를 전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 내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한 국가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양자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분석의 단순화 경향은 사회과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세력전이이론과 같은 경우는 거형이론인 동시에 중범위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세력전이이론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질서에서 도전국과 방어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같은 논리를 지역 내

<sup>14</sup> 대표적인 핵억지이론은 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억지전략의 측면에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들이 연구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기 연구의 과제로 남겨놓았으며 다양한 핵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전성훈, 『핵억지전략과 북한 핵문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I
II
III
IV
V
VI

질서에서의 도전국과 방어국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두 국가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질서가 있다고 보고 양자 간의 관계를 풀어내기도 한다.<sup>15</sup>

본 장에서 염두에 둔 또 하나의 접근은 핵과 더불어 재래식 전력을 역지의 시각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핵역지이론들은 핵무기에 의한 억지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지를 종합하여 억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즉 재래식 무기의 상대적 비교를 핵무기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얻는 억지조건에 포함시키질 않고 있다. 이는 파괴력이라는 면에서 재래식 무기에 비교해서 핵무기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왈츠는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의 우월성이 갖는 이점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암묵적으로 핵역지에서 차지하는 재래식 무기의 역할을 축소시켰다.<sup>16</sup> 그러나 억지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가 갖는 모든 면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련이 서유럽으로 팽창하지 못한 것이 미국의 대소련 핵역지 때문인가, 아니면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지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로지 핵에 의한 억지 때문이었다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7</sup> 또한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와 핵보유국 간의 전쟁은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핵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위협을 한다고 해도 상대국이 재래식 무기

---

1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홍우택, “상대적 국력이 국가 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경험분석을 통한 전쟁이론의 확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pp. 27~52.

16. Sagan and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p. 32.

17. 페인(Keith B. Payne)은 억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억지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eith B. Payne,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6).

로 공격해 오는 것을 막지 못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 1. 역지의 구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지이론에 의해 제시된 역지의 방향은 핵의 대치상황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의 대치상황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핵능력을 상대방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인 핵능력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상대적인 핵능력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핵능력을 보유한 상황이 있을 것이며, 상대적인 핵능력이 평형을 이룬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림 III-1>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상대적인 핵능력의 상황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1>의 오른쪽 축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B라는 국가가 A국가의 인구를 없앨 수 있는 정도를 상징한 것이고, 왼쪽 축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가령 그림의 하단에 있는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는 A, B국가 모두 상대방 국가의 인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 상호확증파괴 상황은 양 국가 모두 상대방의 1차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2차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는 상대방에게 헤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만약 B라는 국가가 A국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능력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A국가는 B국가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림의 오른쪽 대량보복(MR: Massive Retaliation)에 해당된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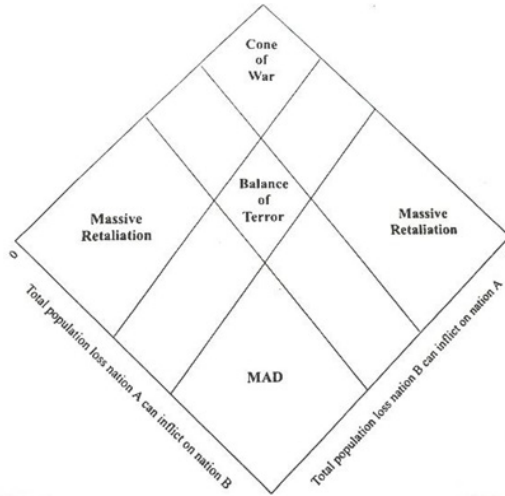
I
II
III
IV
V
VI

량보복은 상대적인 핵능력 면에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일컫는다. 가령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의 경우가 핵의 비대칭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보복공격의 두려움 없이 주변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1>의 가운데 부분의 공포의 균형(BOT: Balance of Terror)은 두 국가가 상대방과 균형을 이룬 핵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어느 한 국가도 상대방의 핵공격에 보복할 수 있는 2차 보복공격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상호확증파괴의 경우와 차이점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2차 공격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림 III-1>의 맨 윗부분에 표시된 ‘cone of war’는 A와 B국 모두 핵능력은 없고 재래식 무기로만 균형 상태를 이룬 경우를 일컫는다. 즉 재래식 무기로만 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을 억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림 III-1 역지의 구조<sup>18</sup>



100

고전억지이론과 세력균형이론, 그리고 세력전이이론은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상황내지는 구조 하에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 아래 절에서는 각각의 이론들이 제시하는 전쟁의 가능성과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I

II

III

IV

V

VI

<sup>18</sup> Ronald L.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2000), p. 85에서 재인용.

## 2. 고전억지이론의 시각<sup>19</sup>

고전억지이론은 핵무기 보유 목적과 전쟁비용에 관한 그들의 가정을 바탕으로 전쟁가능성을 판단한다. 우선 고전억지이론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선제공격을 위한 공격용이 아니라 보복 위협을 위한 방어용이라고 핵의 용도에 대해 가정을 하고 있다. 즉 억지를 위한 용도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고전억지이론은 전쟁비용을 전쟁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하게 되고, 따라서 전쟁의 가능성은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고전억지이론이 주장하는 억지의 구조에 따른 전쟁가능성은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III-2>를 보면 2차 보복능력까지 갖춘 상호확증파괴나 대량보복 상황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이 낮게 표시된 반면, 핵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인 ‘cone of war’나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는 전쟁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전쟁비용을 전쟁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전억지이론은 재래식 무기만이 가용수단인 ‘cone of war’ 상태가 상대적으로 전쟁비용은 적고,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cone of war’에서는 A국과 B국 모두 전쟁을 억지할 수 없고, 두 국가들은 평화보다 전쟁을 외교정책의 연장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

<sup>19</sup> 고전억지이론의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Frank C. Zagar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A Critical Assessment,”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1, No. 4 (1996), pp. 365~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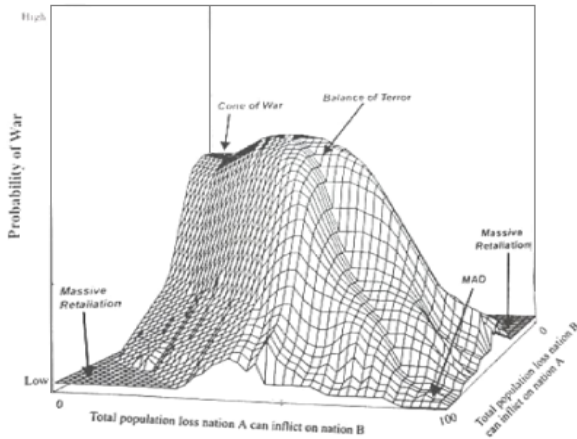


이러한 고전역지이론의 시각은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어지고 있다. 즉 충분한 2차 보복공격능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만일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 두 국가 간에 갈등이 고조될 경우 어느 한 국가는 선제 공격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더구나 상대방의 의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상대방의 보복공격기회를 제거하려는 유혹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과 패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게 되기에 오히려 ‘cone of war’에서 보다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역지이론은 어느 한 국가만이라도 충분한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전쟁의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고전역지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상호확증파괴 상황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상호확증파괴 상태에서는 전쟁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어느 국가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 전쟁비용이 평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호확증파괴 상태를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고전역지이론가들은 냉전이 냉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핵무기의 존재에서 찾고 있다. 즉 미국과 소련 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전쟁자체가 상호파괴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두 국가 모두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I
II
III
IV
V
VI

●그림 III -2 고전억지이론과 핵전쟁의 가능성<sup>20</sup>



고전억지이론의 특이한 점은 상호확증파괴와 더불어 대량보복조차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안정된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핵무기 보유 목적과 전쟁비용에 대한 고전억지이론의 가정 때문이다. 이 이론은 핵이 우월한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핵보유국인 약소국은 핵보유국인 강국을 공격하지 않는데, 약소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고전억지이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들의 무정부상태라는 가정과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섞이지 않는 점이 있다. 또한 현실에서도 핵이 없는 국가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전

<sup>20</sup>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p. 88에서 재인용.

쟁을 도발하였던 경우, 즉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감행한 경우를 보더라도 설명력이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하다.

### 3. 세력균형이론의 시각

세력균형이론은 전쟁이 아닌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을 능력 내지 군사력 면에서의 균등(parity)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 면에서 균등상태는 물론 핵을 포함시킨 능력 면에서의 공포의 균형, 그리고 상호확증파괴 상태를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보았다. 전쟁가능성이 낮은 구조를 균등한 능력을 가진 상태로 본 이유는 고전억지이론과 마찬가지로 전쟁비용을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세력균형이론과 고전억지이론은 차이가 있다. 후자가 무기의 파괴력으로 전쟁비용을 산출했다고 하면, 전자는 무기의 파괴력은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과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즉 세력균형이론은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전쟁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능력 면에서 균등하게 되면 전쟁가능성이 낮아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피해보다 내가 더 많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되면 전쟁비용이 낮아지는 것이기에 전쟁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력균형이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항상 상대방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sup>21</sup>

<sup>21</sup> 세력균형이론의 시각과 주장은 다음을 참조: Kenneth N. Waltz, *Theo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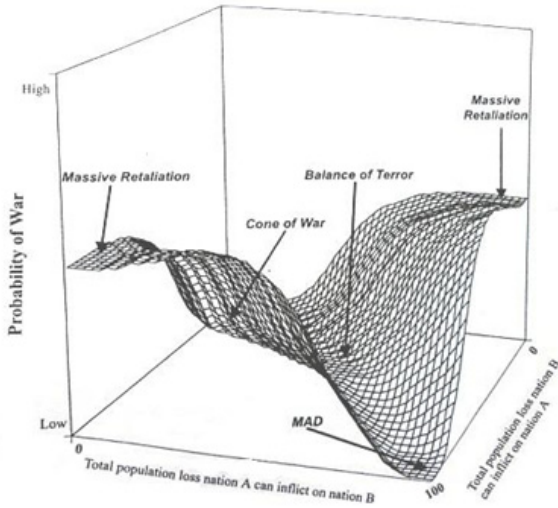
<그림 III-3>은 세력균형이론이 주장하는 억지의 구조에 따른 전쟁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능력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cone of war,’ 공포의 균형 그리고 상호확증파괴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낮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균형 상태 중에서도 전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확증파괴 상황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세력균형이론은 보았다.<sup>22</sup> 상호확증파괴 구조에서는 핵무기의 파괴력으로 인해 전쟁비용은 극도로 높아지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공포는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고전억지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세력균형이론가들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에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상호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보복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았다.

---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sup>22</sup>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pp. 201~202.

그림 III-3 세력균형이론과 핵전쟁의 가능성<sup>23</sup>



반면에 세력균형이론은 전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량보복 구조를 불안정한 상태로 보고, 이 상태에서는 능력이 우월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세력균형이론가들은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반대하였다. 즉 세력균형이론 시각에 의하면 전략방위구상은 두 국가 간의 균형을 깨트리려 한 국가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량보복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량보복 상황에서는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자신이 지니게 된 우월성의 이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상대방을 움직

I
II
III
IV
V
VI

<sup>23</sup> Ibid., p. 202에서 재인용.

이게 강요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된다고 풀이하였다. 또한 대량보복 상황에서는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sup>24</sup> 즉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긴 것이다. 이때 핵능력이 우월한 국가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복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4. 세력전이이론의 시각

기본적으로 세력전이이론은 고전억지이론 그리고 세력균형이론과는 사뭇 다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전억지이론과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정치의 구조를 무정부상태로 보는 반면, 세력전이이론은 국가 간의 관계가 위계적인 질서 하에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다. 결국 세력전이이론의 주장은 앞 절의 세력균형이론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이 능력의 균등을 평화의 조건으로 여긴 반면,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같은 조건은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세력균형이론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가 국력이 우월한 국가인 반면에, 세력전이이론에서는 한쪽이 우월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평화의 조건이 된다.<sup>25</sup> 더

---

<sup>24</sup> Robert Powell,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sup>25</sup> 세력전이이론의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Knopf, 1958);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구나 세력전이이론은 상대적인 국력의 배분상태만으로 전쟁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전역지이론 그리고 세력균형이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세력전이이론은 상대적 국력의 배분 상태와 더불어 두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순응도의 여부를 전쟁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26</sup>

핵무기로 인한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고전역지이론과 세력균형이론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력전이이론에서는 두 국가사이에서 핵능력이 우월한 국가가 국제질서 혹은 양자 간에 존재하는 질서의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한 안정된 평화가 유지되는 반면, 이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의 핵능력이 우월하게 되거나 균등한 상태가 되면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 핵의 균등상황인 상호확증파괴 구조에서 어느 한 국가가 질서에 불만족하고 있다면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았다.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세력전이이론은 핵으로 인한 전쟁비용의 상승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여긴다. 따라서 잠재적인 적 대국과 균등한 재래식 무기로 대치하는 상황보다 핵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sup>26</sup>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국가 간의 관계에는 질서가 존재하는데, 이를 구분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국제질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역질서, 그리고 양자관계에 존재하는 질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가능성은 이 질서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순응도 여부와 상대적 국력의 배분 상태의 조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전국가가 국력이 상승하여 방어국과 국력 면에서 균등상태를 이루게 되는 시점에 도전국가에 의해서 전쟁은 발생한다고 본다. 반면에 질서에 만족하는 국력이 우월한 방어국은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까닭에 이 국가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Ronald L.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I
II
III
IV
V
VI

세력전이이론은 비록 상호확증파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질서의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국가가 대량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제일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대량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게 되면 상호확증파괴 상황과 동일하게 전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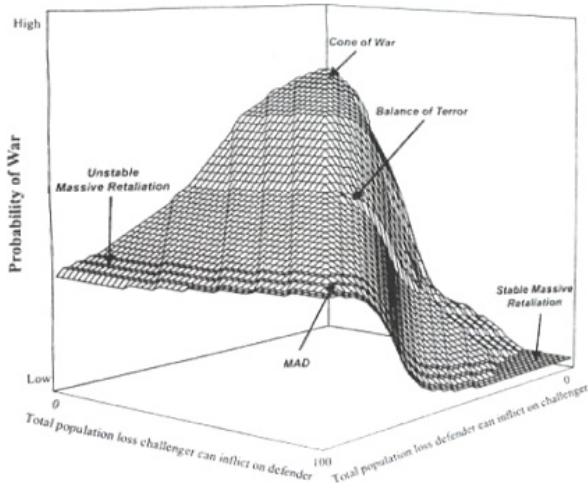
<그림 III-4>는 세력전이이론이 주장하는 바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e of war’에서 공포의 균형 그리고 상호확증파괴를 가로지르는 선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핵으로 인한 전쟁비용의 증가가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세력전이 이론에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림 III-4>는 전쟁비용 자체가 전쟁을 막거나 긴장고조를 뒤집는 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상호확증파괴 구조에서도 그리고 그림 왼쪽에 위치한 대량보복 구조에서도 전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준다. 즉 세력전이이론에서는 핵무기로 인한 파괴에 대한 공포심이 핵전쟁을 막는 데는 불충분한 것이다. 핵의 균등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질서를 바꾸고 싶은 도전국가는 핵으로 인해 전쟁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세력전이이론의 주장이다.

---

27. 세력전이이론에서 확장된 억지이론에 관한 시각은 다음을 참조: Jacek Kugler and Douglass Lemke (eds.),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Jacek Kugler, “Political Conflict, War, and Peace,” in Ada W. Finifter (ed.),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II*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3).



그림 III-4 세력전이이론과 핵전쟁 가능성<sup>28</sup>



이와 같은 세력전이이론의 주장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국가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의 현상유지에 만족하느냐의 여부를 상대적인 핵능력에 결부시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 국가의 핵능력이 질서유지를 선호하는 국가의 핵능력에 비슷하게 견주게 되면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자신에게 유리한 질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전쟁비용을 제하고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냉전이 냉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세력전이이론은 다른 해석을 내어 놓고 있다. 냉전시기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배한 이유는 미국이

I
II
III
IV
V
VI

<sup>28</sup>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p. 91에서 재인용.

소련보다 핵을 포함하여 우월한 국력을 유지하였고 소련은 이러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들을 상대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력전이이론은 이스라엘이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 독점적인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만약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의 국력이 증가한다면 이스라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현상유지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며 이 와중에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들 중동국가들은 작은 영토의 국가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핵무장만으로도 이스라엘과 핵균등 상태를 이룰 수가 있으며, 만일 이렇게 중동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핵전쟁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량보복 구조의 상황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세력전이이론은 현상유지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가 핵능력에서 우월한 경우만이 전쟁발발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그림 III-4>의 오른쪽 대량보복이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이에 반해 <그림 III-4>의 왼쪽 대량보복은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가 핵능력이 우월한 경우로 그림 오른쪽의 대량보복보다 전쟁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전자는 기존의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세력전이이론의 시각이다.

## 5. 현실에서의 핵전략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이론가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정책들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력 균형이론가들은 균형을 깨트린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략방위구상을 반대한다. 세력전이이론가들은 핵의 확산은 여러 지역에서 상호확증파괴 구조를 야기 시켜 불안정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핵확산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미국 내의 논란들도 각기 다른 이론에 기반을 둔 의견들이 충돌을 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하지만 어느 이론이 제기하는 비판이 적절한 것이며, 보다 나은 정책제안을 내어놓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력과 현실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선별하여야 할까? 다시 말해 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준을 내세워야 할까?

이론은 자신의 논리를 바탕으로 예측이나 전망을 내어 놓는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혹은 중국은 ‘A’라는 사안에 대해 ‘a’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의 바탕에는 특정한 시각이나 이론에 기반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구조의 성격, 그리고 국가의 목적 등에 관한 기본가정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전망이 유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제정치이론은 물론 핵역지이론에서도 개략적인 국가의 행동양태를 유추하고 있다. 이렇게 이론에서 유추된 국가의 행동양태를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가의 행위와 비교함으로써

<sup>29</sup>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홍우택·이장원,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8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I
II
III
IV
V
VI

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서 본 절에서는 지난 미국의 핵전략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만일 미국의 핵전략이 특정 억지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특정 억지이론으로부터 유추한 미국의 행위는 실제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미국의 행위와 동일한 성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략이 어느 핵억지이론에 바탕을 두고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지닌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결정자가 선별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론에서 유추한 국가의 행위가 실제 국가의 행위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면 그 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서 보다 나은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핵전략들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론들을 평가해 보았다.

## 가. 상대적 핵능력에 따른 핵전략

핵전략은 상대적인 핵능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핵전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에 비해 우월했을 시기에 미국은 핵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외교적 목적을 취하려는 강압정책을 선택하였다. 이후 미국과 소련 간에 핵능력이 균등하게 되면서 미국의 핵전략은 강압정책의 수단에서 전쟁억지의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즉 상대적인 핵전력 내지는 핵능력이 소련과 대등하게 되면서 미국은 전쟁을 억지하려는 목적으로 상호확증파괴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핵은 미국과 소련의 손에만 있질 않고 다른 국가들로 확산이

되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는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래에는 위의 핵무기 보유국들 외에 테러집단도 핵무기에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결국 핵전쟁의 가능성은 핵보유국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테러집단에 의한 핵공격 가능성도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억지전략도 고안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상대적인 핵능력의 변화가 국가들로 하여금 어떠한 핵전략을 선택하게 했는지 시기별로 살펴본 것이다.

#### 나. 미국의 핵독점과 핵전략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라는 이름으로 핵개발을 시도하였고 핵무기는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 핵무기가 개발된 1945년 이래 1949년 까지는 미국에 의한 핵독점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였다. 핵무기의 위력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증명되었고, 미국은 이러한 핵무기의 위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흥정의 수단으로 핵을 이용하였다. 핵의 독점기간 동안 미국의 외교적 흥정은 주로 강압(**compellance**)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Harry Truman**)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대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위협하면, 이러한 위협을 받은 상대방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강압정책은 핵무기를 등 뒤에 업고 상대방이 나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I

II

III

IV

V

VI

## 다. 미국의 핵우위와 핵전략

1949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미국이 소련에 비해 우월한 핵전력을 갖추고 있던 시기였다. 비록 소련은 1949년 카자흐스탄에서 핵실험에 성공을 하였지만, 핵능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미국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에 의해 핵군사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소련에 대해서는 대량보복 전략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동맹국을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대량보복 전략은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할 경우 소련 본토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미국의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은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이고 대량으로 보복을 감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sup>31</sup>

핵보유 면에서 더 이상 독점적인 위치가 아닌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소련에 강압하기 위해서는 소련에 비해 우월한 핵전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이를 위해 미국은 대량보복 전략을 선택하였다. 대량보복 전략은 군사지역만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 지역까지도 핵공격으로 대량파괴를 입히겠다는 전략이다.<sup>32</sup> 결국 핵전멸(nuclear annihilation)이라는 위협으로 강압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은 미국의 핵우위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

<sup>30</sup> 강압정책에 대해서는 Thomas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1966) 참조.

<sup>31</sup>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anuary 25, 1954.

<sup>32</sup> Amos A. Jordan, William J. Taylor, and Lawrence J. Korb,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pp. 66~69.

## 라. 상대적 핵평형과 핵전략

195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간의 핵전력은 과거에 비해 균등상태로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1957년에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고, 1960년대에 들어서 2차 공격능력을 확보한 다음부터 미국은 더 이상 핵을 사용한 강압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소련을 대량파괴 한다고 하더라도 2차 공격능력을 확보한 소련은 당연히 보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믿었고,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대량파괴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정책으로 여겨졌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상대방에게 위치를 감추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1차 공격에서 이를 모두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대량파괴전략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2차 공격능력의 등장 때 문만은 아니었다. 쉘링(Thomas Schelling)에 의하면 소련이 2차 공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미국이 동맹국의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소련에 대해 대량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소련을 믿게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도 소련이 유럽을 공격할 때 과연 미국이 자신의 영토피해를 감수하고 소련을 공격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는 대량파괴전략에서 벗어나 핵전쟁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다. 결국 핵무기는

<sup>33</sup>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외교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수단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수단으로 탈바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억지는 2차 공격능력의 확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남아 있는 보복능력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억지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쟁억지에서는 핵공격을 받게 되면 공격한 상대방에게 핵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공격능력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케네디(John F. Kennedy)와 존슨(Lyndon Johnson) 행정부 시기 미국은 상호확증파괴 원칙에 입각한 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례로 미국은 1965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억지는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마. 핵확산과 핵전략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핵전략은 또 다른 변화를 겪어야 했다. 냉전 이래 미국의 핵정책이 소련과의 핵경쟁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이었다면,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위협이 아닌 불특정 테러집단의 위협으로부터 본토의 안전보장을 대비해야 했다. 다시 말해 테러집단은 물론이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국의 대상이 되었고, 미국은 다양하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능력기반접근(capability-based approach)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했다.

이러한 핵전략은 과거의 핵전략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



다. 우선 과거 상호확증파괴에 기초한 핵억지전략을 넘어 불량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전에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량살상무기를 소지한 집단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선제공격을 이용해서라도 없애는 것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2001년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발표한 행정책보고서에서는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았다. 잠재 적국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해올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핵 없는 세상을 구호로 삼고 있는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는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가 갖는 역할을 축소하고, 핵확산과 핵 테러리즘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핵전략과 근본적인 전환이 있는 핵전략은 아니다. 2010년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의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당사국과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거꾸로 놓고 보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적 핵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결국 미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을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사용억제로 두어 핵무기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테러집단에 대한 대응은 부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I
II
III
IV
V
VI

## 6. 각각의 억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쟁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어찌면 전쟁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만큼 자신도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억지이론의 시각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감수하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억지이론은 전쟁이라는 선택을 가능케 만드는 요인(도전자의 핵능력)과, 이를 억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방어자의 핵능력)을 기본 설정으로 삼고 전쟁이라는 국가의 행위 가능성을 중심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국제구조 혹은 질서에 대한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고전억지이론이나 세력균형이론 모두 국제질서를 무정부상태로 가정하고 있다.<sup>34</sup> 두 이론은 무정부상태에서는 평화가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이 핵의 균등이라고 보고 있다. 핵균등 하에서는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극대화가 상호억지라는 기능을 통해 잠재워지는 것이다. 즉 핵균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방어용 내지는 위협용이 되는 것이다. 핵균등상태에서 국가들은 상호확증파괴라는 위협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 핵무기를 상대방의 수

---

<sup>34</sup> 왈츠는 무정부 상태를 각각의 국가들이 무력을 사용할지 여부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정부의 권위의 부재라고 보았다. 즉 무정부상태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권위가 존재하지 않아 규칙이나 규범이 국가 간 관계를 지배하기 보다는 이익이나 권력의 쟁취가 국가들의 목적인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102~128.

준에 맞추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에 도움이 될뿐더러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고전억지이론은 다른 억지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정부 상태라는 가정을 버리고 있다. 즉 상대적 핵능력 면에 있어 우월한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정부상태라는 가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고전억지이론의 주장에 의하면 대량보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보복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핵 우월국가는 절대 핵을 사용하여 자신보다 약한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무정부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 국가가, 핵능력 면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하면 전쟁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무정부상태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핵이 우월한 국가의 행동을 유추하기 보다는, 우월한 국가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핵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상대방과 핵을 균등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핵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대량보복 능력을 소련보다 먼저 만들어 내었고, 이후 소련이 핵개발을 통하여 상호확증파괴 구조에 이르게 되었다. 고전억지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소련은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미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핵개발을 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해 세력균형이론의 시각에 비추어 보면 소련의 핵개발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선점한 대량보복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공격을 두려워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소련은 보다 전쟁가능성이 낮은 상호확증파괴 구조로 이동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에서 보듯이 세력균형이론에 의하면 만일 한 국가만이

I
II
III
IV
V
VI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았고, 상호확증파괴 구조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낮다고 여겼다.<sup>35</sup>

사실 핵무기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이래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경우는 대량보복 구조에서였다. 2차 대전 말기 미국은 일본을 핵폭격 하였고, 당시 일본은 핵능력이 없었다. <표 III-1>에서도 세력균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은 대량보복 구조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렇다고 단 한 번의 사례를 놓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대량보복 구조라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해 보인다. 왜냐하면 대량보복 구조에서도 핵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면서도 핵은 사용되지 않았다.

아무튼 미국은 핵능력 면에서 소련에 비해 우월했을 당시에도 핵공격을 하지 않았고, 소련이 핵개발을 하는 과정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중국이 핵개발을 하는 것도 미국이나 소련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고전억지이론과 세력균형이론을 빌리면 미국과 소련은 각각 소련과 중국의 핵개발을 방해할 필요가 없었다. <표 III-1>에서 보는 것처럼 대량보복 구조에서 상호확증파괴로의 전환은 모두 전쟁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이 자신과 핵능력에서 균등하게 되면 오히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었고,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전쟁가능성이 낮은 상호확증파괴 구조로 이동이 필

---

<sup>35</sup> Michael Intriligator and Dagobert Brito, "The Stability of Nuclear Deterrence," in Jacek Kugler and Frank Zagare, *Exploring the Stability of Deterrence* (Denver: GSIS Monograph Series in World Affairs, 1987).

요했다고 볼 수 있다.

● 표 III-1 핵억지이론들이 주장하는 전쟁가능성 요약

	고전억지이론	세력균형이론	세력전이이론
Cone of War	높음	낮음	높음
Balance of Terror (공포의 균형)	높음	낮음	높음
Massive Retaliation (대량보복)	낮음	높음	높음 혹은 낮음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파괴)	낮음	낮음	높음

그러나 세력전이이론의 시각을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의 핵능력 증강은 위험한 일이었다. <표 III-1>에 보면 세력전이이론은 상호확증파괴 구조에서 전쟁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소련이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예방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여하튼 미국과 소련은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서로 갖춘 냉전시기를 보내면서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상호확증파괴 구조에서 전쟁가능성이 낮다고 주장을 한 고전억지이론과 세력균형이론이 같은 구조에서 전쟁가능성을 높다고 평가한 세력전이이론보다 설명력이 나아 보인다. 하지만 세력전이이론과 다른 두 이론은 냉전시기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고전억지이론과 세력

I
II
III
IV
V
VI

균형이론은 냉전시기를 상호확증파괴 구조로 보고 상호확증파괴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냉전이 냉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력전이이론은 냉전시기에도 미국은 소련에 비해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고 해석을 한다. 즉 다른 이론들이 냉전시기가 상호확증파괴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비해 세력전이이론은 같은 시기를 대량보복의 구조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상호확증파괴에 기초한 핵억제가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상호확증파괴 구조에 관한 억지이론들의 적실성은 핵확산 문제에서 국가들의 행위를 통해 짚어볼 수 있다. 현재 핵에 관한 세계의 화두는 핵의 확산이다. 고전억지이론과 세력균형이론은 상대방에 대해 2차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호확증파괴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핵대치 상황이고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이라고 본다. 심지어 만약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게 2차 공격능력까지 보유하게 되면 핵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sup>36</sup> 심지어 세력균형이론가들은 과거 전략방위구상을 반대하였는데 상호확증파괴 구조에서 전략방위구상의 성공은 대량보복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때 대량보복 능력을 확보한 국가는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았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핵무장국과 대치하고 있는 비핵보유국이 핵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며, 가능한 한 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은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

---

<sup>36</sup> Bruce Bueno de Mesquita and William H. Riker, "An Assessment of the Merits of Selective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6, No. 2 (1982), pp. 283~306; Sagan and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차 공격능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공유되어야 하고 따라서 단독적으로 새로운 핵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더구나 핵무기의 감축이나 제거는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한 일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핵을 보유한 약소국이나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들에게 핵무기가 확산이 되는 것은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은 세력균형이론이나 고전역지이론이 주장하는 바와는 어긋난 모습임에 틀림없다. 오직 세력전이 이론만이 핵의 확산을 위험한 일로 간주하고 있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무분별한 핵의 확산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핵전쟁의 가능성은 국가들이 보유한 핵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핵능력과 함께 현상유지의 질서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질서에 대해 만족하는 국가들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는 것과는 달리 불만족하는 국가들의 수중에 핵이 들어가는 것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핵의 확산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은 영국의 핵개발을 도왔으며, 비밀리에 프랑스의 핵개발도 지원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상유지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전쟁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질서를 자신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핵억지란 견고하기 보다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안정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현상유지의 질서에 만족하는 국가가 우월한 핵능력을 갖는 것이며,

I
II
III
IV
V
VI

핵균등상황에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재래식 전력마저 균등상태에 이르게 되면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sup>37</sup> 핵전력으로만 전쟁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고전억지이론이나 세력균형이론과는 달리 세력전이이론은 핵전력 면에서의 균형과 더불어 재래식 전력 면에서의 균형이 합쳐져야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앞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력균형이론과 세력전이이론 간에 설명력의 우열여부를 내리기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핵의 확산을 반대하는 현재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세력전이이론의 설명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서로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조건이라는 주장에 수긍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 평화의 조건이라고 보는 국가는 오직 북한뿐이다. 세력전이이론을 빌리면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를 상호확증파괴 구조로 전환시킨 것이 된다. 작은 영토에선 소수의 핵무기도 상호확증파괴 구조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에 만족을 하는 국가도 아니다. 이 질서를 바꾸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성을 띠는 것이다.

---

<sup>37</sup> Jacek Kugler, "Terror Without Deterrence: Reassess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8, No. 3 (1984), pp. 470~506; Jacek Kugler and Frank C. Zagare, "The Long-Term Stability of Deterr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5, No. 3 (1990), pp. 113~128; Frank Zagare and D. Marc Kilgour, "Asymmetric Deterr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1 (1993), pp. 1~27.



## IV. 핵억지와 군비경쟁



로마의 경구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준비를 하라”는 말이 있다. 물론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이 눈앞에 서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대방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이면서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상대방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를 이룬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만, 우선순위에서 억지를 제외하고 평화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다. 어쩌면 순진무구하다는 비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조차 없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눈앞에 놓인 현실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10년 11월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 40여kg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미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말했으며 “이 핵폭탄을 미사일이나 수송기로 운반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sup>39</sup>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한 이래 주변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하였고 현재에도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 대응책은 북한의 핵포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39. 『조선일보』, 2010년 11월 3일.

I
II
III
IV
V
VI

앞장에서는 핵억지이론을 바탕으로 핵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세력균형이론을 따르면 북한의 핵능력과 균등한 능력을 갖추어야 억지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고, 세력전이이론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능력을 요구한다. 아직까지 핵무기를 능가할 수 있는 무거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핵을 통한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핵무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남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이 반대를 할 것이며, 중국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반응할 것이다. 일본도 이들 국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며, 어쩌면 일본의 국가 내에서 핵무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부각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핵보유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비경쟁이 부추겨 질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비록 남한이 핵무장은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과의 공조로 이루어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 들더라도 동북아지역 국가 간에 군사력 증강문제는 예민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남한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기타 주변국들을 긴장시켜 갈등에 이르기까지 만들게 되는 것일까?

군비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은 월리스(Michael D. Wallace)와 알펠트(Michael F. Altfeld) 간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연구자 모두 군비경쟁의 사례들을 대

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하였지만, 분석결과의 해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윌리스는 군비경쟁이 존재하는 분쟁은 군비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분쟁의 경우보다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군비경쟁의 유무와 전쟁의 유무를 대비시켜, 군비경쟁을 수반한 분쟁의 82%는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만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였다.<sup>40</sup> 이에 대해 알펠트는 윌리스의 분석은 변수와 데이터의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1, 2차 대전에서 이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확전을 통해 다른 국가의 개입이 이어진 경우를 고려치 않고 해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군비경쟁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sup>41</sup>

이후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군비경쟁과 전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에 의해 분석된 결과들을 종합하면 군비경쟁과 전쟁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딜(Paul F. Diehl)은 군비경쟁이 있었던 사례들 중에서 25%만이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군비경쟁이 없었던 전쟁 사례들 중에서는 13.5%가 전쟁으로 이어진걸 보면 군비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sup>42</sup> 모로우(James D. Morrow)와 같은 경우도 군비경쟁을 동반한 분쟁 중

<sup>40</sup>-Michael D. Wallace, "Armament and Escalation: Two Competing Hypothes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6, No.1 (1982), pp. 37~56.

<sup>41</sup>-Michael F. Altfeld, "Arms Races?-And Escalation?: A Comments on Wall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7, No. 2 (1983), pp. 225~231.

<sup>42</sup>-Paul F. Diehl, "Arms Races to War: Testing Some Empirical Linkage," *Sociological Quarterly*, Vol. 26, No. 3 (1985), pp. 331~349.

I
II
III
IV
V
VI

에 14~24%만이 전쟁으로 이어진 걸 보면 군비경쟁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보았다.<sup>43</sup>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군비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래식 무기의 군비경쟁과 유사하게 분석하는 것이 대체적이다. 인트릴리게이터(Michael D. Intriligator)와 브리트(Dagobert L. Brito)에 의하면 핵무기 군비경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조건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군비축소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발발 여부는 억지력이라는 요인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다.<sup>44</sup> 사실 군비경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군비경쟁 자체는 전쟁이나 평화를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 군비경쟁은 필요조건 혹은 충분조건 어느 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일 수 있다.<sup>45</sup> 따라서 군비경쟁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힘들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한편에선 “평화를 원하면 전쟁준비를 하라”는 말처럼 상대방에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준비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는다. 다른 한편에선 나의 군비증

---

<sup>43</sup> James D. Morrow, “A Twist of Truth : A Reexamination of th Effects of Arms Races on the Occurrence of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3, No. 3 (1989), pp. 500~529.

<sup>44</sup> Michael D. Intriligator and Dagobert L. Brito, “Arms Races and Instabil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9, No. 4 (1986), pp. 113~131.

<sup>45</sup>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Arms Races and the Opportunity for Peace,” *Syntheses*, Vol. 76, No. 2 (1988), pp. 263~283.

강은 상대방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군비증강이 나의 안보를 공고히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안보딜레마를 내세우기도 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군비경쟁으로 인한 군사력 증강이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된 판단내지는 긴장을 조성하여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즉 군사력의 증강이 안보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결과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쟁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을 할 것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담보라고 여긴다.

어쩌면 군비증강에 관한 주장들은 앞 장에서 살펴본 전쟁가능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비경쟁으로 인한 결과가 상대적인 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바탕으로 전쟁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한 분석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남한이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우월한 군사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견줄 만큼 구축하기에는 제한요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기에 미국과의 동맹이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데 필수요인이라고 결론을 내어놓을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 중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중친미(親中親美)가 앞으로 한국의 외교방향이라는 주장이 현명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실상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쟁관계라고까지 할 수 있는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급할 때마다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중국에 기대하기 힘든 것이 있

I
II
III
IV
V
VI

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뒷받침해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 V. 핵우산의 허와 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일 북한이 남한에 핵공격을 하면 미국은 보복으로 북한에 핵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북한의 잠재적 핵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의 일환인 핵우산은 동맹국이 적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되면 핵우산을 제공하는 국가가 동맹국을 대신하여 침략국에 핵으로 보복공격을 하여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버슨(*Randolph M. Siverson*)과 테네포스(*Michael R. Tennefoss*)는 1816년부터 1965년까지의 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대국을 동맹국으로 삼은 약소국들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장억지의 정책적 실효성을 보여주려 하였다.<sup>46</sup>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자신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핵우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도 미국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여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일까? 북한은 그러한 핵우산의 위협을 인지하여 도발을 하지 않을까?

만일 북한이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믿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남한을 공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억지는 실패할 것이다. 반면에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에 제대로 퍼질지가 의심스럽다면 남한은 북한에 위협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의 입장을 가정하여 억지의 실패와 성공의 경우로 구분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남한도 의심이 없고, 북

<sup>46</sup> Randolph M. Siverson and Michael R. Tennefoss, "Interstate Conflicts: 1815~1965,"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9, No. 2 (1982), pp. 147~178.

I
II
III
IV
V
VI

한도 위협을 느낀다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심을 품지만 북한은 의심의 여지없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반은 성공적인 억지라고 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은 제거할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남한은 핵우산을 신주단지 모시듯 여기는데 반해 북한이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억지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모두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면 이는 억지의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4가지 경우에서 현재의 남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확장억지의 성공조건으로 제일 먼저 손꼽는 것은 신뢰성이다. 즉 잠재적 침략국은 방어국의 억지위협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위협을 믿지 못하면 억지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크게 군사적 능력과 의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방어국과 방어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동맹국의 군사적 능력이 잠재적 침략국을 억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이 존재해야 잠재적 침략국은 억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방어국과 그 동맹국이 잠재적 침략국의 공격을 억지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야 잠재적 침략국은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군사적인 능력 면에 대해 휴스(Paul K. Huth)는 확장억지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방어국과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동맹국의 군사력이 잠재적 침략국의 군사력보다 강해야 한다고 보는 동시에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동맹국이 방어국을 지원해서 얻는 이득도 커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47</sup>

---

<sup>47</sup>- Paul K. Hut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또한 잠재적 침략국에 비해 방어국과 그 동맹국이 단기간 동안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대효용(expected utility)개념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잠재적 침략국이 방어국과의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기대효용은 물론, 방어국의 동맹국과의 전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이 전쟁 이외의 방법, 예를 들어 외교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보다 크지 않아야 확장여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sup>48</sup> 그만큼 잠재적인 적국이 군사적인 면에서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능력 내지는 보복공격의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역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우산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군사적인 능력 면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필요한 상황에서 핵우산은 펼쳐질 것이라는 핵우산 제공국의 의지에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한에 제공하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포함한 핵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는 국가는 전무하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능력만큼 핵우산을 펼칠 수 있는 미국의 의지도 의심에 여지가 없는 것일까? 남한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북한이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확장여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의지를 믿는 것이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가 제공국의 의지를 믿지 않으면 제공을 받는 국가는 자체적으로 안보위협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찾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잠재적 적국이 갖는 핵우산의 신뢰성과는 별도로 확장여지는 실패라고

<sup>48</sup> Bruce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pp. 114~115;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Reason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1986), pp. 1113~1131.

I
II
III
IV
V
VI

볼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상호안보조약이나 핵우산 공약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핵우산제공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다. 어찌 보면 규범적인 방법을 통해 동맹국들을 보호하려는 의사를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1978년 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한 이래,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북한의 도발의욕을 억지하기 위해 남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하여 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은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수립직후에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군사 및 경제원조는 물론 주한미군주둔 요구를 뒤로하고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발표하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다수에 걸쳐 미국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포레스터(Forestal)은 “군사적 견지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에 현존 군사력을 유지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피터슨(Peterson) 육군 장군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기 철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9</sup>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과정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상이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휴전이 진행되더라도 남한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동의해야만 원조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대응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

---

49. 전호환,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한국국방연구원, 2008), pp. 29~57.

부는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휴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입장변화를 표명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남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경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군의 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하에 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자동개입조항도 없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50</sup>

한국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과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한반도 개입을 두려워 한 미국의 행동은 푸에블로호(Pueblo號) 나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 비밀접촉을 통해 직접협상을 시도하였고,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한창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작전권을 회수하여 단독으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업포를 놓았다.<sup>51</sup> 결국 미국은 작전권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달래려 하였다.<sup>52</sup>

그렇다고 미국이 한반도의 상황에 개입되는 것을 무조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 한국전쟁 이래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 바탕에는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I
II
III
IV
V
VI

<sup>50</sup>- A Lett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June 22, 1953, FRUS 1952~1952, Vol. XV, Part II, pp. 1238~1240.

<sup>51</sup>- 전호훤, “미국의 대한(對韓) 군원정책(1976~1980) 변화과정 연구,” 『군사』, 제65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p. 238.

<sup>52</sup>- 전호훤,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p. 37.

군사행동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sup>53</sup>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던 카터 행정부가 1975년 유엔군사령부를 대체 하는 한미연합사를 설치한 것이나, 한국공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군은 놔두고 지상군만 철수하도록 하는 계획 변경, 그리고 공격용 무기의 한국이양은 항상 제외되었던 사실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라고 평가되고 있다.<sup>54</sup>

하지만 남한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신뢰를 미국에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과거 미국과 핵보유국들의 행적을 돌이켜 보면 미국의 핵우산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어찌면 너무 순수한 발상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미국이 자신이 직접 공격을 당하면 몰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핵보복을 감행할지는 불확실하다. 여태껏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핵으로 대응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확대억지의 효과가 증명된 바도 없다.<sup>55</sup> 예를 들어 미국은 월맹과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월남과는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방위조약에는 유사시 월맹이 월남을 공격하면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미군 철수 2년 후 월맹은 다시 공격을 했고, 이때 미국은 월남과의 방위조약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다.<sup>56</sup> 1954년 1월 인도차이나 전쟁 끝무렵에는 미 국무장

53. 전호원,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p. 37; Franklin B. Weinstein and Fuji Kamiya (eds.), *The Security of Korea: U.S. and Japanese Perspective in the 1980*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p. 159.

54. 전호원,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p. 37; Franklin B. Weinstein and Fuji Kamiya (eds.), *The Security of Korea: U.S. and Japanese Perspective in the 1980*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p. 159.

55. 김재한, “핵과 초강대국의 평화,”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2001).



관 델레스가 당시 공산세력인 호치민(HO Chi Minh)에게 핵공격의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호치민은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디엔 비엔 투(Dien Bien Phu) 전투에서 호치민이 승리하자 미국의 핵협박은 모습을 감추었던 일도 있었다.<sup>57</sup>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한 사례들은 적지 않다. 프랑스의 핵무장도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즉 미국이 소련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핵공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핵보복을 감행할 것이라는 데에 의문을 던졌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능력과 핵무기가 자신의 수중에 있어야 소련을 억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도의 경우도 소련으로부터의 핵우산 제공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핵무장에 대한 불안으로 소련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하고 핵무장을 하였다. 핵우산의 신뢰에 의문을 가졌으나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의 진척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이 자신의 영토 파괴를 감수하고 북한에 핵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던진다는 것이 과연 쓸데없는 질문일까?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에 핵우산 공약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열린 지난 2009년 10월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확장된 핵억제력을 한국에 제공기로 약속하고, 핵우산 외에도 첨단 재래식 전력도 제공기로 합의하였다. 금년 10월의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핵억지정책을 협의하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

56. 전호환,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p. 38.

57. Sagan and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p. 16.

I
II
III
IV
V
VI

기로 합의하였다.<sup>58</sup> 미국의 당국자는 유럽이외의 지역에서 상설 확장 억제기구를 마련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이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한국 사람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핵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가 견고한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핵억지는 물론 일반적인 전쟁억지도 심리적인 면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심리적인 면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관계는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사실이며,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임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심리적이 아닌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번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설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방향이나 억지수단을 내어놓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한국의 손에 북한의 핵시설과 같은 전략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재즈(JASSM)급 무기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9</sup> 미국은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핵시설 및 핵전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60</sup>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력은 한국에게 제공되고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미국 측에 의해서만 운용되는 것이다.

---

<sup>58</sup> 『중앙일보』, 2010년 10월 9일.

<sup>59</sup> 『조선일보』, 2010년 10월 9일.

<sup>60</sup>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End of MAD? The Nuclear Dimension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4 (2006), pp. 7~44.

각각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확장영지를 제공받았던 프랑스와 인도는 자신들의 손에 운용되는 억지책만이 유일한 안보수단이라고 믿고 핵무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선부르다. 두 경우 모두에게 핵전쟁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공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그렇게 하였다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I

---

II

---

III

---

IV

---

V

---

VI

---



## VI. 결론: 억지의 방향



지금까지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몇 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핵억지에 관련된 사안을 풀어내 보았다. 각각의 장들은 북한의 핵을 억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였다. 언급하였다시피 핵억지는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가능성 내지는 전쟁가능성을 낮추려는 조건을 찾아내려는 시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핵억지이론들은 각기 다른 가정에 기반을 두고 억지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기도 하지만, 어느 이론도 핵억지를 하는데 있어 핵이 불필요하다고 여기진 않는다. 국가가 지닌 핵능력이 상대방의 핵과 균형을 이루어야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보다 우월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억지의 조건이라고 보기도 한다. 어쨌든 핵을 억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모든 억지이론의 공통분모는 핵이다. 억지이론을 고민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핵이 없이 핵을 억지한다는 것은 없었다. 물론 세력전이이론과 같은 경우엔 핵능력과 더불어 질서에 대한 만족도를 또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핵이 있는 국가가 선호하는 질서에 순응하는 것만이 세력전이이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이 없는 국가가 평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다.

북한이 원하는 질서에 순응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남한이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 그 질서가 남한이 보존해야 하는 질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에 대해 미국의 핵을 이용하여 억지를 하고 있다. 어찌면 이러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래서 남한의 핵억지 방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빠지지 않고 내어놓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동맹을 강조하는 것

I
II
III
IV
V
VI

이다. 그렇지만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낼 수만은 없는 이유들도 있다. 왈츠는 만약 억지가 실패하게 되면 지도자들은 대량학살을 초래하는 보복공격을 하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관리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것을 되새기면 미국의 핵우산은 편안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sup>61</sup>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호신수단을 내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도 핵에 대해 결정권이 없는 남한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을 수 있다. 그래서 인지 북한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폐기와 연동시키겠다는 입장을 틈틈이 밝히고 있다. 미국과 한반도에서의 핵군축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핵협상의 당사자에 남한은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남한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핵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남한이 핵문제에 관해서 북한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현실적인 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면은 과거 남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계기로 비핵화를 추구한 것이 결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억지를 보장하는 결정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도 만든다.<sup>62</sup>

---

<sup>61</sup> Sagan and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p. 35.

<sup>62</sup>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남한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서 핵을 제외시켰고, 그해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술핵무기 철수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핵주권론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들도 있다. 적어도 핵무기의 공격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의 핵무장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제한요인들이 너무 많다. 방향은 남한이 결정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쪽이면 된다. 핵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핵우산과 같은 억지방안의 운용에 부분적으로나마 남한이 결정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필요는 충족될 수 있다.<sup>63</sup>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남한이 앞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에 관한 문제다. 2014년에 만료가 되는 현재의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협상이 진행이 된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지만, 한국은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낮은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이라는 재처리 방법도 미국에 의해 제동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번 원자력 협상에서는 비록 공동 관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주기완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전술핵무기의 공동운영 방식은 예전 NATO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중열쇠(dual key)방식을 도입하여 핵무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sup>63</sup> 예를 들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남한이 핵개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2010년 7월 27일.

I
II
III
IV
V
VI

미국이 서유럽에게 제공하였던 방식이다.<sup>64</sup>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성은 두 국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 일본과 서유럽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모습은 두 국가 간의 신뢰형성은 물론 억지의 효과와 북한의 핵포기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비록 공동 관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억지하는 데에는 남한의 손도 포개져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

<sup>64</sup> 전술핵무기의 공동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전성훈, “미국과 북한의 핵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16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0).

## 참고문헌

### 1. 단행본

전성훈. 『핵억지전략과 북한 핵문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홍우택.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8.

Bueno de Mesquita, Bruce. *The War Tra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Feldman, Shai. *Israeli Nuclear Deterrence: A Strategy for the 1980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Huth, Paul K.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Jordan, Amos A., Taylor, William J., and Korb, Lawrence J.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Kugler, Jacek and Lemke, Douglas (eds.).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Organski, A.F.K. *World Politics*. New York: Knopf, 1958.

Organski, A.F.K. and Kugler, Jacek. *The War Ledge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ayne, Keith B.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6.

- Powell, Robert.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Sagan, Scott D. and Waltz, Kenneth 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 Schelling, Thomas.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_\_\_\_\_.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Tammen, Ronald L.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2000.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 Weinstein, Franklin B. and Kamiya, Fuji (eds.). *The Security of Korea: U.S. and Japanese Perspective in the 1980*.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 2. 논문

- 김재한. “핵과 초강대국의 평화.”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2001.
-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분석.” 『국가전략』. 제11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05.
- \_\_\_\_\_. “미국과 북한의 핵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략연

- 구』. 제13권 제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 \_\_\_\_\_.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16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0.
- 전호환. “미국의 대한(對韓) 군원정책(1976~1980) 변화과정 연구.” 『군사』. 제65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 \_\_\_\_\_.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국방연구원), 2008.
- 홍우택. “상대적 국력이 국가 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경험분석을 통한 전쟁이론의 확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 홍우택 · 이장원.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8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Altfeld, Michael F. “Arms Races?—And Escalation? A Comments on Wall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7, No. 2, 1983.

Bueno de Mesquita, Bruce and Lalman, David. “Reason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1986.

\_\_\_\_\_. “Arms Races and the Opportunity for Peace.” *Syntheses*. Vol. 76, No. 2, 1988.

Bueno de Mesquita, Bruce and Riker, William H. “An Assessment of the Merits of Selective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6, No. 2, 1982.

- Cha, Vict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2, 2002.
- Diehl, Paul F. "Arms Races to War: Testing Some Empirical Linkages." *Sociological Quarterly*. Vol. 26, No. 3, 1985.
- Intriligator, Michael D. and Brito, Dagobert L. "Arms Races and Instabil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9, No. 4, 1986.
- \_\_\_\_\_. "The Stability of Nuclear Deterrence." in Jacek Kugler and Frank Zagare. *Exploring the Stability of Deterrence*. Denver: GSIS Monograph Series in World Affairs, 1987.
- Kugler, Jacek. "Political Conflict, War, and Peace." in Ada W. Finifter (ed.).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II*.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3.
- \_\_\_\_\_. "Terror Without Deterrence: Reassess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8, No. 3, 1984.
- Kugler, Jacek and Zagare, Frank. "The Long-Term Stability of Deterr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5, No. 3, 1990.
- Lieber, Keir A. and Press, Daryl G. "The End of MAD? The Nuclear Dimension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4, 2006.

- Morrow, James D. "A Twist of Truth: A Re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Arms Races on the Occurrence of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3, No. 3, 1989.
- Siverson, Randolph M. and Tennefoss, Michael R. "Interstate Conflicts: 1815~1965."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9, No. 2, 1982.
- Wallace, Michael D. "Armament and Escalation: Two Competing Hypothes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6, No. 1, 1982.
- Zagare, Frank C. "Classical Deterrence Theory: A Critical Assessment."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1, No. 4, 1996.
- Zagare, Frank C. and Kilgour, D. Marc. "Asymmetric Deterr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1, 1993.

### 3. 기타자료

-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합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 I )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 II )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김규륜 외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C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도 동향 1994-2009		1,5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 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 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룡 외
2009-02(I)	1)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2)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3)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4)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 Studies Series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ah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i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기 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mailto: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